「大衆정치인」이미지작업 활발

요즘의 政街는…

大權후보 추대론 떠도는 민정계首長 朴泰俊 民自 최고위원

지도자論 강조…6共失政 목청

反YS세력 「상징인물」로 부각

각종행사 참가…「홍보기획팀」도 곧 발족계획

重鎭들 잇달아 접촉

朴泰俊民自党최고위원이 최근 민정계중진들과 잇단 회동을갖고, 당부회의에서도 전에없이 목소리를 높이는등 부쩍 「활발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는「대중적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 刻印작업도 병행, 党內外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가 최근 李鍾贊 李春九의원, 朴哲彦체육청소년장관등과 잇달아 만나, 민정계의 향후를 논의한것은 일단「汎민정계단합」의 과시로 비쳐졌다.

이는 金泳三 대표최고위원의 부시美대통령 면담이후 확산되는「대세論」에 제동을 걸면서, 盧泰愚대통령과 金대표에게 「다른움직임」이 엄연함을 보여주기위한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그의 움직임은 「계파首長」으로서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중진등과의 잇단회동에서「次期大權 예비후보로 적극나서라」는 추대論이 그에게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들이 다. 요컨대 그가 민정계의 大權후보가 될것이냐에 政街의 관심이 쏠리고있는것은 물론 그가 민정계후보로 나설것이냐, 단순한 계파관리자로 머물것인가를 단정키는 아직 이르다. 여권내부의 여러사정상 党內에 느계파도 후계문제를 공식적으로 내놓을 분위기가 아니고, 특히 盧泰愚대통령의「직계」인 민정계로서는 金연합」의 대표주자로 부작이 大權까지를 겨냥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大權후보로서의 그의 대중적 호감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점차 자신의役割 의식

그가 아직까지도 政界에서는 兩金에 비해 생소한 인물이고, 정치적인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있다. 민정계의 한 인사는 「朴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浦鐵회장으로 더 비쳐져있어 大權후보로 변신하려면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꾸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즉 그가 5·16군사정부때부터 정치에 몸담아 여권의 권력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한 처신을 하고 있지만, 勢가 모아진다고 판단되면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할것이란 얘기등이 그것이다.

朴최고위원 자신은 이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점차 자신의「역할」을 의식하기 시작하는것 같다는게 측근들의 伝言이다.

<李容柱기자>

◇朴泰俊民自党최고위원이 최근 민정계 단합과 자신의 이미지 부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권후보」를 염두에 둔 활동이 아니냐는 등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與野 총장회담과 향후 전망

民自党의 金潤煥, 민주당의 金元基사무총장 회동을 시발로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与野선거법협상의 돛이 올랐다.

○…17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있은 兩人의 첫 対坐는 서로의 意中을 타진하는 탐색전인 탓인지 「협상 難航」예상과는 달리 일단 順航의 모습을 연출.

4·26총선직후의 4党시절 당시 민정-평민 兩党의 원내사령탑이었던 이들은 시작전 의례적인 「신경전」도 없이 사진기자촬재가 끝나자마자 비공개회담에 돌입.

金민주총장은 기자들의 협상전망질문에 「처음부터 어둡다고 할순 없잖느냐」며 「유연한」자세를 보였으며, 金民自총장은 「목 털어놓고 대화하면 몇시간내로 끝날 사안이라며 「마음의 대화」를 강조.

1시간 20분간의 회동이 끝난뒤 두 사람은 「오늘은 국회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주요쟁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다」며 ▲비공식회담을 통한 협상진행 ▲각당 3人씩의실무소위협상병행 ▲早期협상마무리등 3가지原則에 「합의」.

이날 회담에서는 또 그 민주당측에서는 특히 与圈에서 제기된「의원임기만료 1백50일이후 党籍이탈자의 무소속출마금지」「파렴치한 전과자의 출마제한」등의 계속 추진여부를 민정계중진들이 각자 다소간의 입장차는있지만 이 시점에서 朴최고위원을 金대표 견제의「상징」으로내세운것은 「계파 勢모으기」가 절실하다는데는 이해를 함께하고있기때문이다.

「결정적 시기」에 대비

우선 민정계가 단합된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세論」에 흔들리는 일부 민정계의원들의 동요를 막고, 後日을 기하자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후보 추대」라는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시기에 盧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도 민정계가 한목소리로 단합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같은 계파內 분위기를 감안, 朴최고위원은 우선 「계파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점차 행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그가 얼마전부터 당부회의등에서 1백억달러적자경제,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의 문제점등 「6共의 失政」을 과감히 비판하고, 16일 당부회의에서는 법률개정案 제안자의 준비부족을 심하게 질책하는등 전에없이 강한 태도를 보인것도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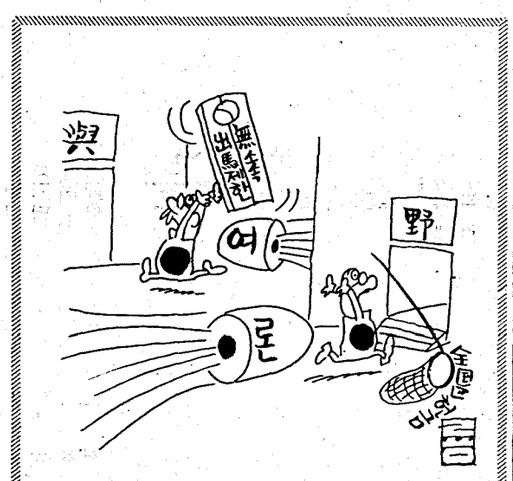
그는 요즘 과거와는달리 공개적으로 민정계를 챙기고 있으며, 16일에는 여군학교를 방문, 정치지도자들의 자질論과 경제발전 책임論등을 간접 강조하는 등 말이 부쩍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그는 학계 언론계출신들로 구성된「홍보기획팀」을 곧「발족시킬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14代 지역구출마를 고려중인것도 선거운동등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실정치의 경험을 축적하기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오는 22일부터 13일간으로 예정된 美日-캐나다巡訪도 캐나다에서는 명예박사학위 수여, 日本에서는 韓日 프로야구슈퍼리그始球등 다양한 일정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같은 그의 이미지刻印작업이 大權후보 추대론 떠도는 민정계首長 朴泰俊 民自 최고위원 요즘의 政街는…

朝鮮漫評 吳龍



시꺼먼 속셈이 다 보인다

닻올린 선거법협상…早期마무리 共感

与,"野 党利의볼모 삼을경우 국민상대 해결"배수진

野, 선거공영제-정치자금법 実利겨냥 「유연성」복안

맨먼저 打診, 「정치문화쇄신차원의 단순한 검토자 할일 뿐」이라는 民自党측 의대답에 첫걸림돌을해소.

또 金민주총장이 제시한 「25일까지 협상時限설정」 「주요쟁점별 실무소위구성」요청은 「오히려 협상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金民自총장의 문제제기로철회, 서로 주고받기.

○…民自党측은 그러나 앞으로의 협상이 어느시점부터는 野党의 정략적「暗礁」에 부딪힐것이라는 진단에 의견의 일치.

민자당은 민주당이 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 예산안, 추곡価및 매입量등 4가지 전략안건을 연결시킨 対与「파상공세」를 이달말쯤부터 전개할것으로 보고 있는것이다. 金민자총장은 이와관련「민주당측이 정치안건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의원선거법을 党利党略의 볼모로 삼을경우 국민을 상대로 해결해나갈수 밖에 없다」고 말해 단단한 배수진을 치고있음을 시사.

民自党측은 이러한 여러 상황을 감안, 우선 兩者간 견해차가 많지않은 선거공영제등에 대한 与野의 「공통분모」를 早期도출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与野가 결국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 分-增区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이 안될경우, ▲현행대로 人口상한선 35만명 ▲총의석수도 가급적 현행대로 2백99席, 또는 최소 증가 ▲타당한 野党요구는 수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民自党이 일각의 비난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구상한선을 30만명으로 낮춰 총의석수가 3백7개로 늘어나는 선거법개정 시안을 만든것은 対野협상 줄다리기用 이라고 한 소식통은 말하기도했다.

民自党은 그러나 선거준비등을 감안, 늦어도 11월중순까지는 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의 처리를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分区및 선거공영제문제와 정치자금법등을 일괄타결하려는 民自党측과는 달리 협상쟁점을 개별적으로 합의도출해 나간다는 전략.

의원선거법과 관련, 선거구증설, 선거운동방식, 전국구배분방식등에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있고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규모, 지정기탁금제의 존폐여부, 특별당비제도화문제에 異見이 커 완전합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데따른것.

민주당은 이에따라 협상시한을 예결위활동시작전날인 25일까지는 못박자고 협상첫날 제의하는등 협상결렬에 대비, 예결위구성단계에서부터 연계시키려는 「속셈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그러나 민주당측은 내심 주안점을 두고있는 선거공영제문제나정치자금법협상에서 民自党측이 대폭 양보할경우 增区문제에서 다소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복안도 마련해놓은 상태.

정치형은등 국민정서를 의식, 일단 「分区절대반대」 입장을 외형상 견지하고있으나 보다 유리한 선거여건을 조성할 수있는 「법적 장치」가 보장되고, 嶺湖南간 增区数의 균형이 적절히 결들여진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것.

예산을 볼모로 한 협상이 국민의 눈에 그리 곱게 비쳐지지않을 것이란 자체진단도 또다른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들이다.

<金允秀-金民培기자>

대졸신입

사원모집

한샘은 장기 경영 목표로 "주거환경개선" "창의적 협동체" "세계속의 한샘"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족한 여건을 개혁, 발전시킴으로써 위의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일꾼을 찾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부문	해당분야	전공	근무지역	인원
영업	내수영업관리, 특판영업, 무역	전공제한 없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명
기획 일반관리	기획, 회계·자금, 판매관리, 인사·교육	•인문사회계열 •경상·법정계열	서울, 안산	
생산 구매	생산, 구매, 설비투자 내자·외자구매	•공학계열 •임학, 임산가공학		
전산	전산PROGRAM	•전산관련학과	서울	
개발	설계, 제품개발업무 인테리어개발	•디자인관련학과 •공학계열 (건축, 전자, 전기)	서울	

2. 응모자격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199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필기시험(영어, 상식, 논문) 및 적성검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다. 3차 : 면접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2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5. 제출기간 및 접수처
가. 기 간 : 1991. 10. 18(금)~10. 26(토)
나. 접수처 :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799호(우편번호 : 110-607) (주) 한샘 인사과

6. 기 타
가. 이력서 상단에 모집부문, 희망근무지역 및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나. 서류제출은 우편으로 하되 당일 우편소인 유효.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라. 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7-1 (주) 한샘 인사과(TEL. 595-0110)

나, 우리, 모두의 한샘

社說

無住宅者 중심의 주택정책

정부가 확정한 주택-토지부문 7차계획은 대체적인원칙과 방향에서는 공감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향후의 주택정책 기본을 하위소득계층과 무주택자 쪽으로 다소 중심을 옮긴 점과 공공-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 그리고 중대형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강화와 주택종합과세제도입 등은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었던 제도들이다.

이 계획에서 가장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된 연간 50만호건설은 현재의 제반경제-재정여건상 큰 무리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언제나 공공건설쪽의 사정이다.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자기모순이 민간에의 과도한 의존과 공공부문투자의 부실이었던 만큼 연간 50만호, 5년간 총 2백50만호 건설 목표도 결국은 민간의 돈을 얼마나 줄이고 공공의 몫을 제대로 확보하느냐가 그 성패의 열쇠를 쥐게될것이다. 더구나 건설물량의 70%를 국민주택 이하로 건설하겠다면 당연히 그에 부수되는 공공재원의 확보가 가장 핵심이 될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점에 대한 정부내합의와 실천계획을 구비하고 있는지 아직은 의문이다.

우리는 신규 건설의 70%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겠다는 방침을 크게 환영하지만, 정부돈 안들이고 민간 업계에 사정해서 그것을 이룰 생각이라면 역시 많은 부작용과 부실을 반복할 것으로 우려한다. 또 하나 주택 금융의 대폭적인 확충없이는 집을 지어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재현될수 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마련돼야 국민주택 1백70만호 건설의 현실성이 입증될 수 있다.

주택 관련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거안정보장과 투기억제에 두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불로소득과 투기이득을 차단하려면 무엇보다도 보유과세가 강화돼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과표부터 현실화해야한다. 96년까지 공시가의 60%로 과표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자세이며 그마저 연차계획이나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조차 없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어려워 보인다.

다만 보유과세 강화를 위해 주택과 건물의 종합 과세제를 도입하고 중대형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 또한 토지과표 현실화처럼 제목만 요란하고 실제는 용두사미가 될까봐 걱정된다. 전산화를 앞당겨 조속히 가구별 합산 과세를 실현하고 규모에 따른 차등-누진과세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분양가자율화문제는 방향은 옳지만 아직은 그것을 거론할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北에 「拉北人士」 소식 요구를

납북 촉진 회담의 우리측 대표단이 22일 평양에 간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촉진회의 우리 대표단에 꼭 한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번 北行길에서 우리의 拉北人士들에 관한 북한당국의 정직-성확한 공식 소명과 자료제공을 요청해 달라는 것이다.

9·28수복당시 北韓 당국자들은 수많은 지도급 人士들을 강제로 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종 「拉北」이 아니었다고 감변해왔다. 그러던 차에 최근 前북한 당국자였던 申모씨가 그때의 「모시기작전」의 내막과 납북 인사들의 비참한 최후에 관한 증언을 해옴으로써 北의 행위가 최초로 폭로되었다.

그러나 申씨의 증언은 북한 당국의 공식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더 분명한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북한당국 역시 이제는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마당에 眞相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수많은 이산가족들 가운데서도 拉北人士 가정의 고통은 각별한 바가 있으며, 그 가족과 유족들은 아직도 그때 이후의 악몽을 떨쳐버릴 수 없어 평생의 恨을 씹으며 살고 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에 관해 아무리 그럴듯하고 거창한 美辭麗句를 되뇐다 해도 이 납북인사 가족과 이산가족들의 恨을 우선적으로 풀여주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런 회담들이 무슨가치가 있단 말인가.

북한 당국은 이데올로기나 거창한 정치-군사문제 또는 혁명과 사회주의 같은 것보다도,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들의 비통한 처지를 조금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주는 것이 얼마나 더 시급하고 가치있으며 절실한 것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비극을 덮은채 그것을 딛고 서있는한 그런 혁명 추구는 한푼의 값어치도 없는 것이다.

우리 대표단 또한 납북 촉진이 가져올 그 어떤 정치적 반사효과에만 행여 집착하지 말고, 납북인사들에 관한 자료요구등 당연히 제기할 문제를 당당히 들고나서는 의연함과 품위를 발휘해야 할것이다.

朝鮮日報만 해도 우리는 方應謨前社長의 납북後 사정과 그 최후의 모습을 알아야할 당연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납북촉진회담에 천명하면서, 우리 대표단의 성의있는 활동을 촉구한다.